

지역 정치권, 혁신도시 사수하라

“공기업 민영화는 곧 혁신도시 포기”

전국 10개지역 국회의원·전문가 연대 구축 필요
비수도권 정치인·시민단체 등 반발 전국 확산

혁신도시 재검토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정부가 여전히 공기업 민영화 등 혁신도시의 근간을 흔들려는 정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지역 정치권·시민 사회단체 등이 혁신도시 사업 축소·변질에 반발하는 지방의 목소리를 한데 모아 혁신도시를 지켜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특히 다수당인 통합민주당이 전국 10개 혁신도시 지역 정치권과 힘을 모아 오는 25일 개최하는 임시국회에서 혁신도시를 핵심 쟁점화 해 혁신도시 사업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국민적 약속으로 확보받아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전문가 등 각계 각층과 전략적 연대를 구축해야 한다는 얘기가. 전문가들은 이같은 연대를 통해 정부가 혁신도시 재검토의 명분으로 내세운 ▲고(高) 분양가 ▲특화 전략 부재 ▲미미한 조성 효과 등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논리를 개발한다고 입을 모은다.

물론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 전문가, 지자체, 지역민들이 뜻을 모아야 할 때다”고 말했다. 또 전국 10개 혁신도시 조성 지자체도 공동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협의체 성격의 모임을 전략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도 혁신도시 조성 지자체가 참여 정부의 국토균형발전 정책을 맹목적으로 부인하는 새 정부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혁신도시 조성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표명하고, 지역발전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고 주장했다. 전국혁신도시협의회(회장 박보성 경북 김천시장)도 이날 성명에서 혁신도시 규모의 축소 또는 백지화에 대해 강력 경고했으며 부산·울산·경남 시민사회단체협의회도 “재검토 계획이 사실이라면 정부 정책에 대해 불복 중 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 시·도의회 비수도권 의장단도 이날 전남도의회에서 성명을 내고 “혁신도시 건설은 지방이 발전을 약속하는 사업이므로 결코 그 의미가 희석돼서는 안되며 사업의 근간인 공기업 이전에 조정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혁신도시 재검토 철회 믿을 수 있나

혁신도시 건설사업을 재검토해 온 정부와 한나라당이 혁신도시 건설 지자체와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계속 추진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이전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책을 내놓는 등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지역민들은 정부가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의 핵심 기업인 한전 등 공기업 민영화 방침을 철회하지 않은 데다 ‘보안적

국토해양부는 또 10개 혁신도시 건설과정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관 청사 신축비 지원, 이전 민간기업 세제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쏟아냈다. 하지만 지역민들은 이를 역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우선 정부가 한전 등 공기업 민영화 방침을 철회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정부, 이전기업 인센티브 등 제공
지역 주민들 “거센 반발 불끄기용”

성격의 혁신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결국 혁신도시가 축소·변질될 것이라는 우려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 혁신도시 건설사업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의 정종환 장관은 17일 한국표준협회 주최로 열린 최고경영자 조찬회에서 “혁신도시 등 지방발전 정책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재검토 중이다”며 혁신도시를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는 관측을 일축했다.

기관을 선정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전이 민영화로 사기업이 될 경우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로의 이전은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정부가 구상 중인 ‘5+2 광역경제권’도 공동 혁신도시 조성의 걸림돌이다. 국토해양부는 현재 혁신도시 구상으로는 자족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5+2 광역경제권 발전전략’과 연계해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기 때문이다. /윤영기자 zenfoot@



“혁신도시 계속 추진하라” 김박원 광주시의회 의장, 김종철 전남도의회 의장 등 광주시·전남도의회 의원들은 17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혁신도시 정책의 계속 추진을 촉구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방역당국 “충분” vs 피해농가 “부족”

■ AI 보상 적정 여부 논란

조류 인플루엔자(AI)가 확산되면서 정부가 17일 피해 대책을 내놓았으나 전남지역 농가들은 “대책이 미흡하기 짝이 없다”며 ‘보상과 생계안정자금 현실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AI피해가 처음 발생한 전북을 중심으로 닭·오리의 매몰처리를 거부하거나 음독 자살을 시도하는 일까지 벌어지면서 보다 현실적인 정부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17일 전남에 따르면 AI로 가금류가 살처분되는 농가에는 가축전염예방법의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장려금 지급 요령’에 따라 보상을 해준다.

지급 요령에는 매몰되는 모든 닭과 달 같은 AI가 발생하기 전의 7일간 산지 평균가격을 적용해 사실상 100% 보상을 해주도록 돼 있다. 여기에 정부의 보상과 민간 유통업자에 대한 판매 사이에서 차액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차액을 지원한다.

또한 AI가 발병한 뒤 3~6개월은 가금류를 사육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농가당 최고 1천400만원의 생계안정자금 또는 소득안정자금이 지원된다.

이같은 지원에 대해 정부는 소 브루셀라 병 등 다른 가축의 피해에 비해 가금류에 대한 보상이 충분하다는 주장이지만 농가들의 입장은 정반대다.

가금류에 대한 보상은 해당 가축의 무게(사육일수) 등을 기준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언뜻 보기에는 적절해 보인다. 하지만 다른 가축과 달리 닭의 경우 부화 후 40일을 전후해 알을 낳기 시작하는데, 그 이전에 살

처분된 닭은 향후 알을 통해 거둘 수 있는 수익이 전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실보상과는 거리가 멀다는 게 농민들의 주장이다.

특히 정부가 살처분 후 재사육 준비기간을 3~6개월 정도로 산정해 생계안정자금(최고 1천400만원)을 지원하는 점에도 불만이 많다.

이 보상규정을 적용할 경우 3천마리를 사육하는 농가는 6개월 분의 생계안정자금으로 약 140만원 정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매달 23만원을 지원받는 셈이다.

지원액이 턱없이 적을 뿐만 아니라 살처분 후 재사육 준비기간이 실질적으로 1년 가량 걸리기 때문에 생계안정자금 등 각종 지원을 배 이상을 올려야 한다는 게 농민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나주와 영암 등 양계 농가들은 살처분 후 2개월 이상 방역을 실시하고 4개월 가량 지나야 방역대에서 해제되며, 이후 모든 오염 요소가 제거될 경우에도 시험사육(1개월 가량 사육해 음성판정이 나오면 재입식 가능)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입식까지 8개월이 소요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이 같이 장기간 사육을 하지 못하면 기존의 유통망이 붕괴될 뿐만 아니라 판로 개척마저 어려워 정상화되기까지는 1년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나주 양계 농가 김모(50)씨는 “정부의 살처분 보상비와 생계안정자금이 기계적으로 책정돼 있어 농가로서는 현행 보상비로는 재가가 불가능하다”면서 “향후 사육이 불가능한 상황을 감안해 현행보다 배 이상 책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정부 “매몰전 평균가격 적용 100% 보상”

농가 “달걀값 포함 안돼 실보상과 거리”

김제서 닭 살처분 앞두고

농민 음독 기도

조류 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전북 김제에서 닭 살처분을 앞둔 농민이 음독을 기도했다.

17일 오전 9시30분께 전북 김제시 용지면 이모(55)씨의 집 마당에서 이씨가 농약을 마시려다 주민들의 제지를 받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씨는 농약병을 입에 대기는 했지만 농약을 마시지는 않아 생명에는 지장 없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목격자 황모(49)씨는 “이씨가 주민 30여명과

함께 AI에 대해 이야기하다 갑자기 농약을 마시 입에 머금고 있던 농약을 뱉어내게 한 뒤 병원으로 후송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이 마을에서 20여년 전부터 산란계 농장으로 생계를 유지해 왔으며 이날 오후부터 닭 2만 6천 마리를 살처분할 예정이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for Gwitturami HomeSmart. It features a chef character and text promoting home services. Key text includes: '집 고치고 싶을 땐 귀뚜라미 홈시스마트', '집 한번 고치려면 믿고 맡길 데가 없으셨죠? 이제 걱정 말고 냉·난방 공사부터 출인테리어까지 귀뚜라미 홈시스마트와 상의하세요!', and a list of services like '1. 냉난방 보일러 등 생활필수품 수리 서비스 전문인력' and '2. 30년된 시멘트벽면 11cm 균열 시멘트로 보수'.